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눈치보기 극심

# “세종시 지켜본 뒤...” 이전작업 올스톱

### 7월 설계발주 약속 기관들 일제히 미뤄

### 부지 매입 예산도 집행 않고 미적미적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 움직임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17개 기관의 이전사업도 지연 또는 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전사업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순항하는 듯 보였다. 지난 3월말 농수산 물유통공사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부지 매입금액의 10%를 납부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5월 분사 이전 기본계획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7월에는 청사설계를 위한 공모 실시할 예정이었으며 지난 6월 분사사옥 특성화 용역 입찰 공고를 한 한국전력거래소도 7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후에 용역 결과를 받기로 했다.

또 지난 2월 청사 이전 업무추진단을 구성했던 농업연수원의 경우 지난 5월에 이전 청사 시설 면적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7월 중에 이전 청사 설계를 발주할 방침이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 3월 사업기본설계를 발주한 데 이어 7월 중 신청사의 설계를 발주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한전KPS(주)는 7월 중 분사이전 기본계획안을 이사회에 통과시킨 뒤 9월께 신청사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었다.

이때까지 17개 이전 기관 중 통폐합 대상인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의 정부의 이전 승인을 마친 상태여서 이전사업은 순조로운 듯했다.

하지만, 7월 중 청사 설계를 발주한다는 기관들이 모두 이를 미루면서 기관 이전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미 이전 대상 기관의 기관장들이 세종시 축소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정부의 세종시 사업의 축소 변화가 상공한다면 혁신도시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축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7월 중 청사 설계 공모를 할 계획이었던 기관 중 한전이 10월초에야 실시하고 나머지 기관은 아직도 기별이 없다.

더욱이 한전의 경우도 올 안에 부지 매입 약속을 깨고 내년으로 미룰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등 다른 기관들도 이전에 대한 어떤 행보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기관 상당수는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확보한 기관까지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세종시 축소·변형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눈치보기는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4일 “이전대상 모든 공공기관이 한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이 부지 매입을 연기하고 세종시가 축소되면서 이전 대상 기관들의 거부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추진상황

기관	이전승인여부	이전인원/총인원	추진상황
한국전력공사	승인	1,425/1,425	구조조정 등으로 부지매입 지연
한전KPS	승인	482/482	이전계획안, 이사회 승인
한국전력거래소	승인	320/320	사옥 특성화용역 시행중(09.7-10)
한국농어촌공사	승인	732/732	용도지역 변경 요청(0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인	325/325	청사 설계 추진 준비중
농업연수원	승인	43/43	중전 부동산처리계획 확정(09.5)
농수산물유통공사	승인	322/322	부지매입 완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승인	101/150	지방이전계획 승인(09.6) 07년 계획에 따르면 부지매입·설계 발주 끝났어야 09년도 부지매입 예산 미확보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폐합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나주)·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문화콘텐츠센터·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총괄)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폐합	-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나주)·저작권위원회(나주) 통합
우정사업정보센터	승인	816/816	기구확대, 추진팀 발족(09.9)
한국인터넷진흥원	통폐합	-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나주)·한국인터넷진흥원(총괄)·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통합
전파연구소	승인	142/142	청사 설계용역 조달청 발주(09.9)
한국전파진흥원	승인	158/158	09년도 부지매입 예산 미확보
한국KDN(주)	승인	944/944	부지매입 지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	승인	188/233	연내 부지매입비 집행 예정
해양경찰학교(교수)	승인	89/89	청사 기본계획 착수(09.7) 부지 보상물건 조사 완료(09.8)

(자료:사립연 의원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한전 등 17개 공공기관이 이주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사업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나주 금천면 한 도로에 세워진 혁신도시 홍보 간판. /최현백기자 choi@kwangju.co.kr

이 같은 현상은 나주혁신도시만의 일은 아니다. 전국 혁신도시의 공공기업 이전부지 분양은 이날 현재 1%에 불과하다. 이전대상부지 202만8천322㎡ 중 1만8757㎡만 분양 계약이 이뤄진 것. 이

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계약으로 혁신도시 이전대상 157개 기관이 이날 현재까지 완료된 유일한 청사부지 매입계약이다.

또 올해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토지

매입예산을 책정한 기관은 총 14개 기관이지만 이 중 실제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1건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상임·사외이사

# 영남출신 40% ‘압도적’

### 장관급 인사보다 지역편중 심각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영남출신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은 14일 국토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제출한 ‘상임이사·사외이사 명단’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236명 중 영남출신이 95명으로 40.3%를 차지했다. 이어 호남 42명(17.8%), 충청 32명(13.6%), 서울 30명(12.7%), 경기 21명(8.9%), 강원 8명(3.4%), 제주 8명(3.4%) 순이었다.

이는 정부 중앙부처 장관급 인사(영남 36.1%, 호남·충청 각 16.7%)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지역 차별적 편중 인사가 더 심각함을 보여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임이사의 경우, 영남 출신이 37명(40.2%), 호남·충청 출신이 각각 15명(16.3%), 경기 10명(10.9%), 서울 8명(8.7%), 제주 4명(4.3%), 강원 3명(3.3%)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는 영남 58명(40.3%), 호남 27명(18.8%), 서울 22명(15.3%), 충청 17명(11.8%), 경기 11명(7.6%), 강원 5명(3.5%), 제주 4명(2.8%)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시설공단과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공사는 훨씬 심각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단의 경우 상임이사 4명 모두 영남 출신이었고, 사외이사는 5명 중 2명(40%)이 영남 출신이었다. 대한주택보증은 상임이사 4명 중 2명(50%)이, 사외이사는 7명 중 5명(71%)이 영남 출신이었다. 한국토지공사도 영남출신 상임이사가 8명 중 3명(37.5%)을 차지했고, 사외이사는 8명 중 5명(62%)이었다.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산항만공사에는 호남출신 상임이사·사외이사는 한 명도 없었다.

조정식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표와 감사인 상임이사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외부감사자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까지 지나치게 영남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민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중립·객관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목기자 jwpark@

## 사회통합위원장 인선 ‘인물난’

### 고건·박세일 등 고사로 후보군 제외...청와대 고심

### 노진영 前목포대총장 등 위원 선임은 마무리 단계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 이끌 위원장으로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워 청와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사회통합위는 계층, 이념, 지역, 세대, 성(性), 인종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해소해 우리 사회를 통합으로 이끌기 위한 조직이다. 이 대통령의 이른바 ‘중도실용’ 국정 철학을 최전선에서 구현할 지속 기구이지만 여기에 맞는 ‘상징성’을 띤 선장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고건 전 국무총리, 박세일 서울대 교수,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 김용준 전 한법재판소장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본인의 고사 등 이유로 초기 검토됐던 후보군 중 다수가 일단 제외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다시 ‘백지상태’에서 위원장 후보 물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사회통합위원장 인선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50명의 위원 가운데 정부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35명의 민간 위원의 인선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통합의 취지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고위직을 지낸 인사도 포함했다는 전언이다.

참여정부 시절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교수, 열린우리당 의원 등을 지낸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청소년보호위원장과 정보통신윤리위원장 등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학계에서는 소설가 황석영, 이문열 씨가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서경문 성균관대 총장, 송호근 서울대 교수, 박희종 서울대 교수,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윤광중 한신대 교수 등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계에서는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이명진 갈릴리교회 목사와 조계종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법동 스님, ‘천주교수도회 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의 오영진 신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소아마비 1급 지체장애인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40여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해온 송영욱 변호사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연세대 인사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너무 가벼워 보인다”는 지적이 많아 백지화했다는 후문이다.

사회통합위는 산하에 계층분과, 이념분과, 지역분과, 세대분과 등 4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마다 정부측 5명 민간측 25명의 위원을 두기로 했다. /연합뉴스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1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5분만에 완성이 가능한 HeartPlus ACID-TRIPLE...  
5000원 이하로 구매 가능합니다.

관주비학기술원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과 함께...  
효과적인...  
효과적인...